

# 광주시 새마을장학금 폐지심의 연기

광주시의회가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간에 갈등이 벌어졌다.

조례안 처리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는 의원 간 의견이 엇갈린 데다 시민단체 사이에 대립구도가 형성되자 심의 일정을 연기했다.

광주시의회는 13일 오전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연주·김광란·

## 시의회 행자위 폐지 조례안 심의 연기

### 조례폐지 찬성단체·새마을회원 간 대립

신수정·최영환·정무창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발의 의원들은 새마을운동의 역사적 평가는 인정하지만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시대에 새마을회에만 자녀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조례 폐지를 놓고 새마을단체와 다른 시민사회단체간에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조례 폐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의원 총회에서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이번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

었으나 논란이 확대되자 심의일을 오는 19일로 연기했다.

이날 의원총회가 열린 대회의실 앞에서는 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 30여 명과 새마을단체 회원 60여 명이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시민회의는 새마을장학금을 '유신적폐'로 지목하고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했으나, 새마을단체는 순수 봉사단체를 폄하하고 있다고 맞섰다.

서은홍 기자

## 화순야산서 불...임야0.1ha 소실

13일 오전 11시49분께 화순군 동면 옥호리 한 마을 인근 야산에서 불이나 산림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불로 임야 0.1ha가 탔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화 작업에는 헬기 1대, 진화차량 5대, 소방관·공무원 80여명이 동원돼 큰 불길을 잡았다.

산림당국은 묘지 인근 밭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불을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화순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화순=박순철 기자

## 위조지폐 만들어 사용한 10대 2명 추가 검거

5만원권 지폐 위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0대 2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전북 전주압산경찰서는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혐의로 A(19)군 등 2명을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된 B(19)군은 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지난 8일 전주 시내 편의점과 주차장 음식점 등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지폐를 위조한 뒤 사업장 13곳에서 위조지폐 13장을 사용하고 거스름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범행 장소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용의자 신원을 확인, 이들을 검거했다.

그러나 A군 등은 모두 주범이 아니라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공범 여부에 대해 파악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 고양아파트서 부패한 40대 여성 시신 발견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부패한 40대 여성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11시47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의 한 아파트에서 A(42·여)씨가 자신의 집 출입문 안쪽에 쓰러져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이웃집에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을 받은 관리사무소 직원의 신고로 발견된 A씨는 이미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으며, 침입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혼자 살던 A씨에게 별다른 지병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 20대 남녀 "환각 물질 흡입했다" 자수

20대 남녀가 환각 물질인 '해피벌튼'을 흡입한 후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2시에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풍선을 이용해 아산화질소(일명 해피벌튼)를 흡입한 20대 A씨와 B씨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 모두 아산화질소를 흡입해 이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고 B씨가 당일 오후 4시30분께 전화를 걸어와 스스로 신고했다.

아산화질소는 무색 투명한 기체이며 주로 의료용 마취제로 쓰인다. 무분별한 흡입은 저산소증을 유발해 최대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그럼에도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흡입하는 등 오·남용 사례가 늘면서 2017년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기재되기 전 알고 있던 번호로 연락해 해피벌튼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현재 건강상 문제는 없으며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지원사업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 亞문화전당 "용역직원 임금체불 소송 지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미화·방호 용역업체 직원 임금체불에 대해 "업체와 직원들간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만 분쟁이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화·방호 업무에 종사하는 용역업체 직원들이 급여 1억60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용역업체와 일부 직원들이 급여에 대한 견해 차이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지급이 안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 부분은 용역업체 내부의 사안이지만 지켜보고 있다"며 "소송의 결과에 따라 직

### "용역업체 감독 강화

### 내년 1월 정규직 채용"

원들과 용역업체 간 분쟁이 조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또 "문화전당은 용역업체와 계약이 종료되는 내년 1월31일에 맞춰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현시점에서 용역계약이 중단되면 관람객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내년까지 계약을 연장했다"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문화전당은 근무환경 개선과 직원들이 근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용역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며 "용역계약의 만료 이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채용이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잔불 정리하는 소방대원들 13일 오전 대전 유성구 용계동의 한 야산 앞에 쌓여있던 쓰레기 더미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잔불을 끄고 있다.

## 선거법 위반 윤장현씨 변호인·검사 공소장 놓고 신경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13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공소장 내용과 증거 채택 등을 놓고 검사와 변호인 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이날 오전 법정동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시장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0·여) 씨에 대한 제2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시장과 김 씨는 이날 법정에서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의 경우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법정에서 윤 전 시장의 변호인은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중 일부 내용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공소장 중 일부 내용이 재판부에

에단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불분명한 표현이 있는데 이를 정확히 특정지어달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검사는 '문제없다'는 취지의 답과 함께 의견서 제출을 통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향후 재판에 사용될 증거 채택과 관련해서도 양측 간 미묘한 견해를 보였다.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윤 전 시장에 대한 세평 등이 담긴 신문 기사는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검사는 선거를 앞둔 당시 상황 등이 실린 신문 기사 또한 증거로 채택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재판장은 다음 재판에서 공소장 정리의 함께 추가 증거 일부 내용의 검토가 필요하며 이날 준비기일을 마무리했다.

다음 재판은 3월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윤 전 시장은 전직 대통령 부인 행세를 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김 씨에게 2017년 12월26일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 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6·13 지방선거 공천(제선) 등에 도움을 염두에 두고 김 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윤 전 시장과 김 씨와의 통화,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돈의 성격과 시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윤 전 시장이 유·무형의 도움을 바라고 돈을 건넨 것으로 본 것이다.

반면 윤 전 시장은 김 씨의 거짓 말에 속아 돈을 빌려줬을 뿐이라며 공소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주춘경 기자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